

(사후)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2019 평등행진 조직위원회
담 당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사후보도자료]2019평등행진 및 평등한달 선포 기자회견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발 송 일	2019년 9월 30일(월) 총 9쪽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18년 10월 20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주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지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혐오발언이 난무하는 한국사회에서 평등을 말하기를,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뿐만 아니라 29개 연대체와 단체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최합니다.
3. 2019 평등행진 조직위원회는 **9월30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10월을 평등주간으로서 '평등한달'로 선포하며 이 기간 진행될 온오프라인 프로그램과 10월 19일 평등행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뿐 아니라 광주와 충남에서도 평등행진과 '평등한달'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 평등행진 조직위원회

(NCKK 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녹색당,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중당, 비정규직 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니브페미, 이주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모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

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연맹(DPI), 한부모정책포럼)

<기자회견식순>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

차별의 현실 규탄 발언

- 후퇴하는 조례, 무너지는 평등 : 박진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다산인권센터)
- '다문화' '이주'를 향한 혐오 :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 피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성소수자혐오선동 : 지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 장애등급제와 차별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평등주간 및 행진 계획 발표 :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우다야 라이(이주공동행동/이주노조), 박래균(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재단사람), 김경자 (민주노총)

첨부 1. 기자회견 발언문

1) 박진

각 지역의 조례들이 혐오세력들에 의해서 개악되고 있습니다. 부천의 문화다양성 조례가, 또 울산에서 대구에서 그 외 다양한 지역에서 인권의 보편적,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평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분들에 의해서 때로는 발의 자체가 포기되거나 아니면 전체회의를 통해서 폐기되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아직 취합이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취합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평등조례가 있었던 경기도에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는 개정안이 올라왔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과되기 전부터, 통과된 이후 많은 분들이 발의 의원과 이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폭탄문자와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혐오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너무나 마땅한 성평등조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 의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구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이 평등조례를 지키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평등조례는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죠. 저희가 모인 이유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혐오의 말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이 사회의 평등, 우리 사회의 인권의 말들을 지켜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평등조례를, 성평등 조례를 혐오의 말로 쏟아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어가 '바

로 너희들'이라고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성평등조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마땅하니까. 인권조례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땅하니까요. 저희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혐오의 말을 중단하라. 차별의 말을 중단하라. 당신들이 퍼붓는 혐오와 차별의 말이 모든 시민들의 권리를 추락시키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평등행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등의 목소리에, 함께 가자는 목소리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 왕지연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인 237만명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져 12만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청소년 인구대비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는 올해 처음으로 2%에 진입하는 놀라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적, 혐오적 발언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은 심화되고 있다고 현실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혐오와 인종차별을 막으려는 제도적 조치가 없더라도 우리 사회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게는 인종차별적 혐오발언이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정현울 익산시장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의 축사에서 잡종강제라는 말을,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육을 잘못시키면 프랑스 혁명처럼 폭동이 일어난다는 등 다문화가정을 비하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차별적 혐오발언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정현울 시장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게도 한 술 더 떠 튀기는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한다며, 당신들을 잡종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정현울 익산시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일어나는 혐오적 표현이나 차별적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유튜브나 SNS를 통해 만들어내는 혐오발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지난 6월, 유튜브에 베트남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영상이 파장을 컸는데 일주일 만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영상이 27건이나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총 21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차별적 본질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을 비방하는 이주민혐오를 부추기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인종차별 및 이주민혐오발언은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주민 단체들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피아

안녕하세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피아입니다.

바로 저저번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본심의가 열렸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과 경쟁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처음이 아님을 짐으며 수많은 아동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실상 아동학대와 다름없는 현재의 입시 위주 교육 패러다임의 시급한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큰 차별 문제로 꼽는 것은 '성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대접 못 받는다'는 차별적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존재합니다. 입시에는 여전히 '공정한 경쟁'에 대한 환상이 존재하고, '출신 학교 또는 최종학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로 인한 곳곳에서의 차별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과 같이 차별이 곧 능력 부족의 어떠한 대가로 여겨지는 사회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학교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아동 학대와 다름없는 지금의 패러다임 속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평등이 능력이 아닌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시작이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매년 청소년들을 압박하고 폭력에 순응하게 만드는 교육을 거부하는 선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지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의 목소리 또한 더욱이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인 차별금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기를 요구하며 평등행진에 참여합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4) 지오

저는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이기 전에, 한 명의 레즈비언입니다. 동성애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싶고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자로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고 싶은 한 명의 성소수자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꿈꾸며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살아있는 존재로 호명 되기 보다 찬성과 반대라는 질문으로, 협상의 도구로 혹은 유예된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또 한 번 데자뷰처럼 익숙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엄연히 정교가 분리된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관심 있어 한다며 던진 질문은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였고, 당시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 사안이 아니나 동성혼은 이르다”고 답변했습니다. 문답의 그 어디에도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염두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존재를 대하는 자세가 이토록 가벼울 수 있습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요? 평등에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까. 존재에 순위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소수자들의 삶을 존중한다면 그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시민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그 삶은 불안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불완전한 삶의 조건 자체가 차별인 것입니다. 대체 어떤 삶이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까.

지난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에서는 더욱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성교육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부 담당자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전혀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말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용어로 곡해되고, 지역의 성평등 조례가 와해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는, 시기상조라는 말조차 유예시켜버린, 너무도 나태해서 분노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촛불 이후 민주사회로의 기대를 품은 지도 3년이 가까워집니다. 이미 사회는 다양한 존재들을 아우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립니다. 위태롭고 불안하지만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 살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대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예우하고 다양한 개인들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성소수자라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편을 가르고 침묵으로 동조하며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는 세력들에 의해 제 삶은 산산히 부숩니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묻습니다. 인권에 반대합니까. 이대로 혐오에 굴복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습니까. 더이상 말장난은 사양합니다. 진짜 제대로 평등을 말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평등을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이고 외칠 것입니다. 가장자리로 내몰린 다양한 삶에 귀 기울이고 끌어안으며 차별과 혐오를 끝장내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고 행진할 것입니다. 10월 19일 이제 우리가 평등을 말하려 갑니다. 순번없이 순위 따지지 않고 한데 어울려 평등을 말하는 자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5) 문애린

소개받은 저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문애린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1882일 농성을 했었습

니다. 그 결과 정부가 올해부터 장애등급제를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하면서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종합서비스표라는 기준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기준표에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또 다시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표에 들지 못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1급-6급을 정해놓고 이 등급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들지 못하면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종합서비스 기준표에 들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여도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짜 폐지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예산이 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2017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찾아와서 장애등급제 때문에 돌아가신 장애인들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저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장애등급제 완저 폐지를 하겠다. 기준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받는게 아니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맞춤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시 예산을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장애인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65세가 되면 현재 장애인들이 받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하루 4시간만 받게 됩니다. 실제로 성북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은 당장 10월부터 65세가 되는데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게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지금 장애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차별적인 모습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가정을 이룰 권리가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 시설과 집구석에서 나오지 말라고, 주는대로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법만 있을뿐 아무런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단지 권고사항, 준수사항이 아니라 강력하게 차별을 했을 때 법적 대응과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권리에서 배제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첨부 2. 기자회견문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이 철회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성평등, 문화다양성, 민주시민교육 등을 증진시키려는 조례가 모두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며 막아나서고 있다. 가짜뉴스와 편견을 조장하는 왜곡도 문제지만 그 다음이 더욱 문제다.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조례를 지키고 만들어야 할 의회들이 줄줄이 항복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무슨 주홍글씨인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점점 스스럼없어진다. 올해만 해도 정헌율 익산시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정치인들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인종, 성별, 성적지향, 외모, 사상,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평등이 철회된 자리에 혐오가 번식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만 골라내 삭제했을 때, 2013년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됐을 때, 평등은 철회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던 정치인들도 정부와 국회로 들어가더니 아무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으로 혐오를 승인하고 차별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혐오와 차별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차별의 저지선은 민주주의의 기본선이기도 하다. 우리가 서로 평등하게 동료시민으로 만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혐오와 차별이 우리를 숨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평등의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말이 미래를 위한 평등의 씨앗이다. 평등을 원한다면, 함께 말하자.

정부와 국회는 침묵을 깨야 한다. 혐오선동세력에게 핑계를 돌리지 마라. 당신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혐오선동이 마치 하나의 의견처럼 확산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현실은 차별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가 평등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다. 우리는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2019년 10월을 '평등한달'로 선포한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제 정당의 입장과 계획을 촉구하는 #정당은응답하라 집중행동을 벌일 것이다. 그외에도 다양한 행동으로 한국사회를 평등의 무지개 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19일 모여 한국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침묵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를 향해 거침없이 평등행진의 길을 열 것이다. 대세는 평등이다!

혐오 심은 데 차별 나고 차별금지법 심은 데 평등난다!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누구도 우리를 모욕할 권리는 없다! 혐오선동 끝장내자!
민주주의는 우리와 함께 전진한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

2019년 9월 30일
2019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첨부 3. 평등주간 및 행진계획

2019 평등행진 조직위원회는 10월 한 달을 평등주간으로서 '평등한달'로 선포합니다. 평등한달에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평등을 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행동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등주간 (10월 1일~ 10월 31일)

- <평등을 말하라> '정당은 응답하라' 집중행동
- <평등을 말하라> '대항적 말하기' 구호 공모전
- <평등을 말하라> 인증샷 캠페인과 릴레이인터뷰
- <평등한달>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
- 차별금지법 제정 온라인 서명운동

'평등을 말하라 온라인 집중행동'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정치권이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하지 않도록 그들의 대답을 듣기 위한 집중행동을 실행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문제를 환기하고, 평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각 정당들에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평등한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함께 가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나에게 평등은 어떠한 의미인지'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을 말하고, 이어가는 행동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려 합니다. 또한 '대항적 말하기'를 실천하는 캠페인을 통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각종 혐오표현을 무력화시키고, 이에 맞서는 우리의 외침을 모으고자 합니다.

평등행진 (10월 19일 토요일)

- 10월 19일 2시 서울파이낸스 센터 앞 사전대회 <우리가 말한다>
- 청와대로 행진
- 마무리 집회 <우리는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19일, 2019 평등행진의 거리에서 만나, 함께 청와대를 향해 행진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외침이 사회 곳곳에 닿도록, 침묵하는 정치권이 각성하여 응답하도록, 평등을 열망하는 모든 이들의 소란스러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 평등한달 캘린더

<https://equalityact.kr/calendar/>

** #정당은응답하라 집중행동

<https://campaigns.kr/campaigns/192>

첨부 4. 평등행진 홍보웹자보

